

지역공동체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

박 병춘** · 최현석***

A quantitative analysis of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Focusing on local organizations rooted in grass-roots community activities -

Byung Chun Park · Hyun Seok Choi

- Abstracts -

This study is to perform a quantitative analysis of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and to identify its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local communities. More specifically, we analyz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in activity areas of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and identify desirable ways of revitalizing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and contents of policy-support services. In particular, we focus on comparisons between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y in the form of society-contributing enterprises and those not supported. The results of a survey with 248 organiz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highly desirable to develop the policy to support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Second, the policy support should be centered on financial support, improvement of field skills,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s and infrastructure. Third,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shar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 network among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Fourth, it is required to support local grass roots organizations to guide them to society-contributing enterprises. Fifth, the delivery system of government service should be improved.

Keywords: Local communities, Grass roots organizations, Policy development,
Quantitative analysis, Policy-support services

*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다음 단체의 도움을 받았음: (사)대구시민센터, (사)풀뿌리사람들, (사)광주NGO센터, (사)부산시민센터.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 bcpark@kmu.ac.kr

***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초빙조교수, hschoi@gw.kmu.ac.kr

◇ 논문접수일: 2012. 07. 31. ◇ 논문심사일: 2012. 08. 30. ◇ 논문게재 확정일: 2012. 09. 10.

1. 서론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다항하게 진화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 주력활동 분야별 특성, 활성화 과제 및 정책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정부 정책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공동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과의 협력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지원 서비스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로, 본 연구를 통해 70·80년대 저항적 시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 영역의 동력을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동참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려 한다.

현재 지역공동체가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한 수단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로 인한 양극화와 빈부 격차,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 등, 기존의 국가와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병춘, 2012). 그러나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방편적 공동체가 출현하거나 공동체의 자립성 및 지속성이 취약한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곽선화·문홍석, 2009; 배진영, 2010; 염도민, 2010; 김광선, 2011; 유정규, 2011).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지역공동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내지는 환경을 규명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자생 촉진, 정부지원 이후의 지속성 확보,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communit)란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집단, 사회체제, 사회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박병춘, 2012).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닫힌 공동체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근대적 열린 공동체, 즉 사회나 결사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병춘·김석찬,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협의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라 정의한다(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의 특성인 지리적 근접성,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 정서적인 동류의식(소속감) 중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공동체이다.

지역공동체에 관하여는 그 동안 사회심리학, 지역개발 및 건축학, 주거학, 지역사회 운동(복지, 환경, 주거, 여성, 교육, 건강/보건, 문화, 주민자치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론적 연구접근 방법도 구조기능론적 접근, 시스템적 접근, 갈등론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미시사회학적 접근, 사회구성론적 접근 등, 매우 다양하다¹⁾. 여기서는 지역발전이란 관점에서 본 연구와 비교적 관련성이 높은 몇몇 지역공동체 관련 문헌만을 소개한다²⁾.

최병두(2006)는 공동체운동을 사회공동체, 생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운동으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운동의 기반이 되는 자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성희(2008)는 지역공동체 형성화 과정 및 형성 모형을 연구하였다. 김영정(2008)은 공동체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대표적 전략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과 생태적 환경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전략을 연구하였다. 조권중(2010)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사회적자본의 효과와 정책적 이슈를 연구하였다. 박병춘·김석찬(2012)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DB 정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박병춘(2012)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및 정부지원 지역공동체와 순수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관한 비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개념 및 분류, 연구 내용 및 절차, 연구 가설 및 분석 방법 등, 연구 대상 및 내용을 기술한다. 제3절은 조사 대상 및 방법,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설 검증, 활성화 과제/정책지원 서비스 분석 및 가설 검증 등, 실증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제4절은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한다. 제5절은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한다.

2. 연구 대상 및 내용

2.1 민간자율 지역공동체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 및 주력활동 분야별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활성화

1)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혜원·홍영옥(2002)을 참고할 것.

2) 본연구의 주요 관련문헌 소개는 박병춘(2012)에서 인용함.

화 과제 및 정책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공동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지역공동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를 “타인이나 타기관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지역공동체(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어떤 특정 단체가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지역공동체가 자생, 자율, 자주, 자조, 자립 등의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³⁾.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가 혹은 현재 받고 있는가 여부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 포함 여부에 대한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다⁴⁾. 즉,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증 혹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을 갖는 경우 광의의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다. 예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증 혹은 지정을 받은 사회적 공헌형 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기업 등)이라 할지라도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을 고루 갖춘 지역공동체의 경우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로 간주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지역공동체(단체)’는 정부의 지역공동체(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기업 등) 육성 지원 사업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단체)를 지칭하는 한정적 용어로 사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수민간자율 지역공동체(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박병춘(2012)에 의하면,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는 경제적·사회적 활동기반과 추구하는 주요 목적에 따라 “기업형 지역공동체”, “협업형 지역공동체”,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 중에서도 사회적 공헌형 기업 형태로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회적 공헌형 기업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공동체에 역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민간자율 지역공동체 중에서도 풀뿌리운동에

3)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급조된 조직은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라 할 수 없음.

4) 예로서, 스스로의 원칙에 의거,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모범적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로 분류되는 지역공동체 중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지역공동체는 거의 없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주, 자조, 자립을 목적으로 자생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그러나 박병춘(2012)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분류는 반드시 상호배제적인 것은 아님. 예로서, 필요에 따라 사회적 공헌형 기업으로 인증 받았거나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즉 “정부지원 지역공동체”라 할지라도, 조직의 주요 목적이 풀뿌리 운동에 있고 현재 풀뿌리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면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로도 분류될 수도 있음.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이다. ‘풀뿌리공동체운동’이라는 정의에서 ‘풀뿌리’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민초(民草)라는 의미로 생활 속의 평범한 보통사람들을 우리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운동의 주체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열린사회가 추구하는 운동의 기반과 영역을 표현한다.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지역공동체는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로,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말한다(박병춘, 2012). 본 연구에서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형 지역공동체”와 “협업형 지역공동체”의 경우 관련부처에서 정량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나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또 다른 이유는 풀뿌리운동형 지역활동가들 혹은 지역공동체는 이미 정부지원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구나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가 앞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 연구 내용 및 절차

<그림 1>은 단계별 연구 내용 및 절차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양식을 개발하여 정량적인 횡단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를 새롭게 항목별로 범주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범주화가 필요한 분야는 법적 조직형태와 주력 활동분야인데, 그 이유는 기존의 시민단체 분류기는 민간자율형 지역공동체가 아닌 많은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 급속히 발달, 진화하고 있는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를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6) 예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company.do>)에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가 있고, 지역 풀뿌리형 마을기업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털(http://maul.oneclick.or.kr/web/index/NR_index.do)에 관련 정보가 있음.

7) 기존의 시민단체 분류에는 다음이 있음. 김영정(2004)은 시민단체는 본질적으로 소속 회원들의 이익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봉사단체(member serving organization)와 일반대중의 이익(공익)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봉사단체(public serving organization)로 크게 나누었음. (사)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시민단체총람편찬위원회는 「한국시민단체총람 2009」 편찬 협조요청 문서(문서번호 080728-01)에서 시민단체를 20개의 활동분야로 분류하였음. 광주광역시(2009)는 2009년 6월 「광주지역 시민단체편람」을 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시민단체를 “연합단체”, “시민운동단체”, “종교단체”, “직능기타 단체”로 분류하였고, 시민운동단체는 다시 10개 분야로 세분류하였음.



<그림 1> 과제 주요 단계별 절차

<부록>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실태조사 양식이 있다. <부록>의 실태조사 양식은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고, 수차례의 내부 연구진 회의와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한 것⁸⁾이다. 실태조사 양식은 크게 단체명/연락처, 운영실태, 주력활동분야, 활성화 과제/정책지원 서비스의 4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의 운영실태 부분은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주력활동분야 부분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다향하게 진화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동 영역 및 앞으로의 진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활성화 과제/정책지원 서비스 부분은 활성화 과제 및 바람직한 정책지원 서비스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주력 활동분야를 크게 “사회일반”, “인권/노동/빈민/나눔”, “풀뿌리운동”로 대분류한다. 주력 활동분야에 대분류로 “사회일반” 및 “인권/노동/빈민/나눔”을 포함한 이유는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지역공동체가 전통적인 시민단체 영역에서 진화한 것으로, 아직까지 전통적인 시민단체 활동(사회일반 및 인권/노동/빈민/나눔 활동)과 풀뿌리 지역운동을 병행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이다. “풀뿌리운동” 활동분야는 다시 주민공동체, 대안사회, 도농순환, 공동체 교육, 지역사회공헌으로 중분류하고, 그것들을 각각 다시 세분류하였다. 한편, 연구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세분류별로 기타 항목을 별도로 두어 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2.3 연구 가설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가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지역공동체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활성화 과제 및 정책지원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가설 검정에서 고려하는 단체 유형은 ‘정부지원 지역공동체(단체)’와 ‘순수민간자율 지역공동체(단체)’의 2 유형이다. 일반적 특성 중 연구가설은 활동지역, 연간 예산, 주 수입원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8) 법적 조직형태 및 주력활동분야 분류는 박병춘·김석찬(2012)의 분류 방법과 동일함.

- 연구가설 G1: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활동지역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G2: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연간 예산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G3: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주 수입원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한편, 활성화 과제 및 정책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H1: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최대 애로점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H2: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당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H3: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요구하는 정부지원 형태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H4: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원하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H5: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간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지원조직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가설 검정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단체들의 주력활동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시각적 효과를 위해 막대그래프로 표현한다. 셋째, 단체들의 활성화 과제 및 정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파레토그래프를 그린 후 가설 검정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3. 실증 분석

3.1 조사 대상 및 방법

정량적인 실태조사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⁹⁾, 특히 사회적 공헌형 기업 형태로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회적 공헌형 기업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공동체에 역점을 두었다. 실태조사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아래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총 251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자료가 부실한 3부를 제외한 248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9) 수도권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가 낙후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대구시민센터: 대구 및 경북지역 실태조사/의견수렴
- (사)풀뿌리사람들: 대전 및 충남지역 실태조사/의견수렴
- (사)광주NGO센터: 광주 및 전남지역 실태조사/의견수렴
- (사)부산시민센터: 부산 및 경남지역 실태조사/의견수렴

3.2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표 1>은 본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의 일반적 특성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소재지는 광주가 25%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21%), 대전(19.4%), 대구(16.5%), 경북(14.1%), 충남(4%) 순이다. 활동지역은 대도시가 84.3%로 대부분이고, 중소도시는 15.7%이다. 조사 단체의 약 60%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40%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회원수는 200명 이상인 단체가 35.9%로 가장 많고, 50명~99명인 단체가 8.7%로 가장 적으며, 20명 미만인 소규모 단체는 23.4%로 나타났다.

단체 연혁의 경우 10년 이상이 약 40%로 가장 많고, 2년 이하는 약 20%이다. 연간 예산의 경우 규모가 비교적 큰 2억 이상인 단체가 약 29.5% 정도로 가장 많으며,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단체는 9.4%이다. 단체유형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인증 및 지정되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정부지원 단체는 44.4%를 차지하였다.

<표 1> 단체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상대빈도 (%)	변수	항목	빈도	상대빈도 (%)
소재지	부산	52	21.0	활동지역	대도시	198	84.3
	대구	41	16.5		중소도시	37	15.7
	대전	48	19.4	홈페이지	운영	149	60.1
	광주	62	25.0		비운영	99	39.9
	충남	10	4.0	회원수 (구성원)	20명 미만	54	23.4
	경북	35	14.1		20명~49명	38	16.5
단체유형	정부지원 단체	110	44.4		50명~99명	20	8.7
	순수민간자율 단체	138	55.6		100명~199명	36	15.6
단체 연혁	1년 미만	23	10.1		200명 이상	83	35.9
	1년~2년	22	9.7		연간 예산	2천만 미만	23
	3년~5년	48	21.1	2천만~5천만		46	18.9
	6년~10년	43	18.9	5천만~1억		67	27.5
	10년 이상	91	40.1	6년~10년		43	18.9
				2억 이상		72	29.5

<표 2>는 조사에 참가한 단체유형과 소재지 간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조사에 참여한 단체유형과 소재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구, 대전, 경북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수민간자율 단체에 비해 정부지원 단체가 많이 참여하였고, 부산 및 광주지역에는 정부지원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수민간자율 단체가 많이 참여하였다¹⁰⁾.

<표 2> 단체유형과 소재지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남	경북	전체
정부지원단체	5(-18.1)	30(11.8)	39(17.7)	0(-27.5)	10(5.6)	26(10.5)	110
순수민간자율 단체	47(18.1)	11(-11.8)	9(-17.7)	62(27.5)	0(-5.6)	9(-10.5)	138
전체	52	41	48	62	10	35	248
$\chi^2 = 140.363, df = 5, p - value = 0.000$							

(2) 일반적 특성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

<표 3>은 연구가설 G1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활동지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연구가설 G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부지원 단체는 중소도시에,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3> 단체유형과 활동지역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정부지원 단체	74(-10.3)	26(10.3)	100(0)
순수민간자율 단체	124(10.3)	11(-10.3)	135(0)
전체	198	37	235
$\chi^2 = 13.801, df = 1, p - value = 0.000$			

10) 이 결과는 대구, 대전, 경북지역에 정부지원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부산 및 광주지역에는 순수민간자율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표 4>는 연구가설 G2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연간 예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연구가설 G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연간 예산이 2천만원 미만인 비율이 정부지원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정부지원 단체는 연간 예산이 2억 이상인 비율이 순수민간자율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단체가 순수민간자율 단체보다 예산이 큰데, 이것은 예상했던 결과이다.

<표 4> 단체유형과 연간 예산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2천만 미만	2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2억	2억 이상	전체
정부지원 단체	0(-10.0)	21(0.9)	32(3.2)	16(0.3)	37(5.6)	106
순수민간자율 단체	23(10.0)	25(-0.9)	34(-3.2)	20(-0.3)	35(-5.8)	137
전체	23	46	66	36	72	243
$\chi^2 = 20.484, df = 4, p - value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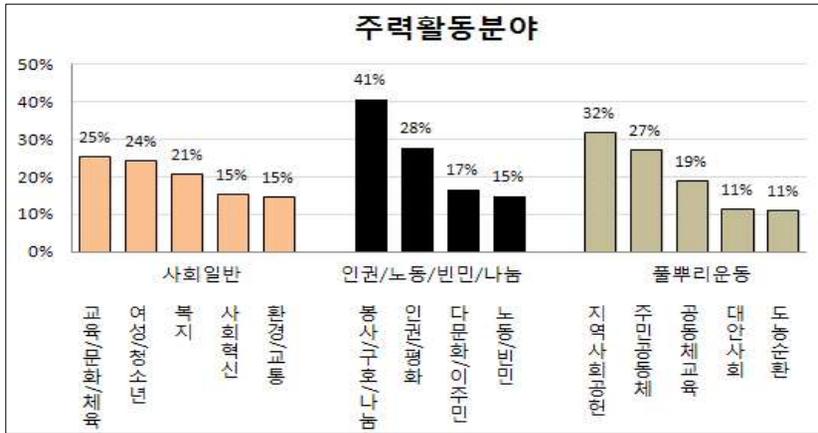
<표 5>는 연구가설 G3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활동지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연구가설 G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부지원 단체는 자체사업과 정부지원금에,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회원회비와 기부금/후원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 단체유형과 주 수입원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회원 회비	기부금/ 후원금	자체 사업	정부지원금	전체
정부지원 단체	3(-22)	8(-11.9)	84(38.6)	17(-4.6)	112
순수민간자율 단체	56(22)	39(11.9)	23(-38.6)	34(4.6)	152
전체	59	47	107	51	264
$\chi^2 = 104.846, df = 3, p - value = 0.000$					

(3) 주력활동분야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주력 활동분야를 크게 “사회일반”, “인권/노동/빈민/나눔”, “풀뿌리운동”로 대분류하였다. 주력활동분야에 대한 대분류 실태조사 결과 “풀뿌리운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약 48%로 가장 많고, “사회일반”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는 35%이었으며, “인권/노동/빈민/나눔”은 약 17%이었다.



<그림 2> 주력활동분야 대분류별 중분류 조사결과 요약

<그림 2>는 주력활동분야 대분류별 중분류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사회일반” 활동분야에서는 “교육/문화/체육” 분야 활동이 25%로 가장 많고, “여성/청소년” 분야 활동이 24%로 비슷하게 많았다. “인권/노동/빈민/나눔” 활동분야에서는 “봉사/구호/나눔” 분야의 활동이 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권/평화” 분야 활동이었다. “풀뿌리운동” 활동분야에서는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자활공동체, 전문지식지원, 시민사회지원 등의 “지역사회공헌” 분야 활동이 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민공동체” 활동이었다.

3.3 활성화 과제/정책지원 서비스

(1) 최대 애로점

<그림 3>은 최대 애로점에 대한 단체들의 인식을 파레토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에서 재정위험이 58.3%, 전문능력부족이 26.5%로, 재정위험과 전문능력 부족만 해결되어도 84.8%의 애로점이 해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민 무관심을 가장 큰 애로점이라 응답한 단체는 11.7%이며, 회원감소를 가장 큰 애로점이라 응답한 단체는 겨우 3.5%이었다. 이 결과는 시민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시민들의 무관심과 회원감소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최대 애로점에 대한 인식

<표 6>은 연구가설 H1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최대 애로점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연구가설 H1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단체 유형에 따라 최대 애로점 인식에 차이가 있는데, 정부지원 단체는 전문능력 부족을 순수민간자율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애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시민 무관심을 정부지원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애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단체유형과 최대 애로점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최대 애로점 단체유형	재정위협	회원감소	시민 무관심	전문능력 부족	전체
정부지원 단체	59 (-1)	3 (-3)	6 (-1.7)	34 (1.3)	102
순수민간자율 단체	75 (.0)	5 (.3)	21 (1.5)	27 (-1.2)	128
전체	134	8	27	61	230

$\chi^2 = 8.719, df = 3, p\text{-value} = 0.031$

(2) 활성화 방안

<그림 4>는 당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단체들의 인식을 파레토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에서 단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당면 활성화 방안은 공공 서비스의 협력/지원이 42%로 가장 크고, 활동가 육성지원이 38.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협력/지원과 활동가 육성지원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단체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표 7>은 연구가설 H2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연구가설 H2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당면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지원 단체는 공공서비스의 협력/지원과 정보공유를 순수 민간자율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반면에 순수 민간자율 단체는 활동가 육성 지원과 단체들 간 연대 강화를 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 민간자율 단체 모두 공공서비스의 협력 및 지원이 단체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단체유형과 활성화 방안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활성화 방안 단체유형	활동가 육성 지원	단체들 간 연대 강화	정보 공유	공공서비스의 협력/지원	전체
정부지원 단체	24 (-13.1)	9 (-2)	13 (4.6)	51 (10.5)	97
순수민간자율 단체	64 (13.1)	17 (2)	7 (-4.6)	45 (-10.5)	133
전체	88	26	20	96	230

$\chi^2 = 17.615, df = 3, p - value = 0.001$

(3) 가장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

<그림 5>는 가장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에 대한 단체들의 인식을 파레토그래프로 표

현한 것이다. <그림 5>에서 단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는 재정지원이 41.7%로 가장 높고, 환경/인프라 구축이 40.6%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환경/인프라 구축이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바람직한 정부지원형태에 대한 인식

<표 8>은 연구가설 H3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가장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에 대한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연구가설 H3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부지원 단체와 순수민간자율 단체 모두 재정지원과 환경/인프라 구축을 가장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지원 단체는 순수민간자율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지원과 정부사업 참여를 더 많이 바라고 있었고,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정부지원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원과 환경/인프라 구축을 보다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단체유형과 바람직한 정부지원형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정부지원형태 단체유형	재정지원	교육지원	정부 사업참여	환경/인프라 구축	전체
정부지원 단체	42 (-4.3)	18 (4.5)	11 (4.9)	40 (-5.0)	111
순수민간자율 단체	64 (4.3)	13 (-4.5)	3 (-4.9)	63 (5.0)	143
전체	106	31	14	103	254
$\chi^2 = 11.227, df = 3, p - value = 0.011$					

(4) 가장 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그림 6>은 단체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방식을 파레토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6>에서 단체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방식을 보면 사회적 기업 39.7%, 마을기업 21%로, 많은 단체들이 사회적 공헌형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17%나 되는데, 이 단체들은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행정이 단체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6> 가장 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표 9>는 연구가설 H4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가장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에 대한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연구가설 H4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부지원 단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의 사회적 공헌형 기업으로 지정 내지는 인증하여 지원하여 주기를 바라는 반면,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아예 바라지 않거나 정부 프로젝트 및 용역 사업 등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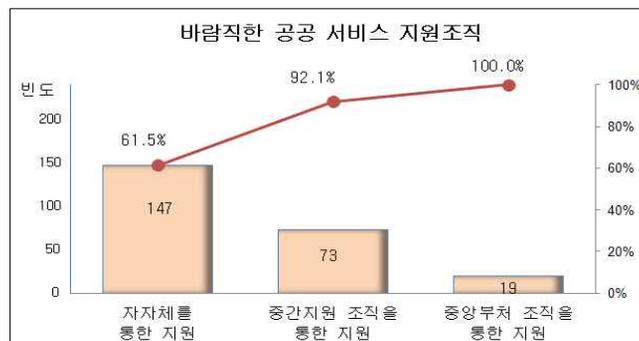
<표 9> 단체유형과 가장 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가장 원하는 공공서비스 / 단체유형	없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정부용역 참여	정부사업 참여	전체
정부지원 단체	0 (-18.2)	61 (18.8)	27 (4.4)	13 (6.8)	3 (-1.3)	3 (-10.4)	107
순수민간자율 단체	38 (18.2)	27 (-18.8)	20 (-4.4)	0 (-6.8)	6 (1.3)	25(10.4)	116
전체	38	88	47	13	9	28	223

$\chi^2 = 83.237, df = 5, p\text{-value} = 0.000$

(5)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지원 조직

<그림 7>은 단체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조직을 파레토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7>에서 단체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조직은 지자체를 통한 직접 지원이 61.3%, 중간지원 조직을 통한 지원이 30.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경직되어 있다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통한 지원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가장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지원 조직으로 중간지원 조직 대신에 지자체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그림 7>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지원 조직

<표 10>은 연구가설 H5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단체유형과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지원 조직에 대한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연구가설 H5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부지원 단체는 지자체의 직접 지원방식을 월등히 선호하고 있고,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중간지원 조직을 통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단체가 지자체의 직접 지원방식을 월등히 선호한다는 결과는 현재의 정부 중간지원 조직이 정부사업 참여 단체들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순수민간자율 단체의 경우조차도 지자체의 직접 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데, 이 결과는 순수민간자율 중간지원 조직(시민센터 등)들이 순수민간자율 단체들로부터 별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10> 단체유형과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지원조직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빈도(표준화 잔차)

단체유형 \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지원 조직	중앙부처 조직을 통한 지원	자자체를 통한 지원	중간지원 조직을 통한 지원	전 체
정부지원 단체	7 (-1.6)	90 (23.6)	11 (-22.0)	108
순수민간자율 단체	12 (1.6)	57 (-23.6)	62 (22.0)	131
전체	19	147	73	239
$\chi^2 = 40.535, df = 2, p - value = 0.000$				

4. 정책적 시사점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풀뿌리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력활동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풀뿌리운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약 48%로 절반에 가까우며, 풀뿌리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의 32%는 지역사회공헌, 27%는 주민공동체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공헌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의 약 58%는 일자리창출, 20%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 결과는 풀뿌리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현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풀뿌리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재정 지원, 전문능력 제고, 환경/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최대 애로점으로 정부지원 단체 및 순수민간자율 단체 각각의 절반 이상이 재정 위협을 듣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 단체는 전문능력 부족을 상대적으로 순수민간 자율단체에 비해 큰 애로점으로 들고 있고, 순수민간 자율단체는 시민 무관심을 정부지원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애로점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적 공헌형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장 바람직한 정부지원 형태로는 재정 지원(42%) 및 환경/인프라 구축(41%)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앞으로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은 물론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협력/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

고,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들은 정부지원 서비스의 협력/지원과 활동가 육성지원을 시급한 활성화 과제로 들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 단체는 정부지원 서비스의 협력/지원과 정보 공유를 상대적으로 당면 활성화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순수민간자율 단체는 활동가 육성 지원과 단체들 간 연대 강화를 상대적으로 당면 활성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 여러 비판(지속 가능성 측면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서비스를 약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보공유, 활동가 육성 지원, 단체들 간 연대강화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보 공유 및 단체들 간 연대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나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개방형 지역공동체 DB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를 사회적 공헌형 기업 형태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되,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태분석 결과 가장 원하는 공공서비스 지원은 사회적기업(40%)이나 마을기업(21%) 등, 사회적 공헌형 기업으로 인증이나 지정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민간자율 단체의 약 33%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헌형 기업 형태의 정부지원에 여러 비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약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특성상 지나친 정부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현재의 정부지원 사업 중간지원 조직들이 정부사업 참여 단체들로 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구나 순수민간자율 중간지원 조직(각 지역의 시민센터 등)들조차도 순수민간 자율단체들로부터 별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효과 및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중간지원 조직들에 대한 선정, 업무감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 정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 주력활동 분야별 특성, 활성화 과제 및 정책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정부 정책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공동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과의 협력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지원 서비스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를 새

롭게 정의하고, 또한 정부지원 지역공동체(단체)와 순수민간자율 지역공동체(단체)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 양식을 개발하여 정량적인 횡단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량적인 실태조사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지역의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48개의 단체 자료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재정 지원, 전문능력 제고, 환경/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협력/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자율 지역공동체를 사회적 공헌형 기업 형태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되,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크게 연구 방법상 한계점과 연구 내용상 한계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구 방법상 한계점은 전자 매체 등의 발달로 조직의 구성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소멸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가상 조직 및 네트워크 조직이 일상화됨에 따라 모집단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표본설계에 의해 실태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그 결과 실태조사가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광주, 부산의 6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대도시 지역보다는 오히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데 본 연구의 조사단체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소재하여 연구의 효과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응답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조사자에 의한 방문 및 면담에 의한 실태조사에 1차적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설문지를 개발함에 있어 응답의 신뢰성 및 내부 일관성 측정 부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내용상 한계점은 본 연구가 단지 양적 실태조사에 국한된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 내지는 환경 규명, 정부지원 이후의 지속성 확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규명은 양적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성적 사례분석 및 성공요인 규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박선화·문홍석(2009). 「200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노동부.
- [2] 광주광역시(2009).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편람」, 2009. 6.
- [3] 김광선(2011).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과제”, 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공동 주최 「2011 지역발전 컨퍼런스」 자료집,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11. 9. 8. ~ 9.
- [4] 김영정(2004). “지역발전의 기대유형과 지역 NGO의 대응: 전북지역 사례”, 「지역사회학」, 5(20), 117-151.
- [5] 김영정(2008). “지역거버넌스와 공동체 운동 -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만들기’ 운동의 사례분석”, 「지역사회학」, 9(2), 5-33.
- [6] 박병춘(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0(2), 1-26.
- [7] 박병춘·김석찬(20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DB정보 플랫폼 개발”, 「지역사회연구」, 20(1), 1-21.
- [8] 배진영(2010).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평가”, 자유기업원, CFE Report, No. 130.
- [9] 염돈민(2010). “지역공동체 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정책 Brief 제81호.
- [10] 유성희(2008).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 부산 YWCA의 차황면 생태마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NGO」, 6(1), 149-185.
- [11] 유정규(2011).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과제”, 「2011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6-45.
- [12] 조권중(2010).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PR-10.
- [13] 채혜원·홍영옥(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 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33-44..
- [14] 최병두(2006).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지리학연구」, 40(4), 513-528.
- [15] http://maul.oneclick.or.kr/web/index/NR_index.do
- [16]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company.do>

<부록> 지역공동체 실태조사 양식

(1) 단체명/연락처

단체명			
대표전화		E-mail	
주소			

(2) 실태 자료(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체크하지 않아도 됨)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제주				
활동지역	<input type="checkbox"/>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input type="checkbox"/> 기타()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운영				
SNS	<input type="checkbox"/> 운영 (<input type="checkbox"/> 페이스 북 <input type="checkbox"/> 트위터 <input type="checkbox"/> 미투데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운영				
법적 조직형태 (중복가능)	<input type="checkbox"/> 임의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input type="checkbox"/> 회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아닌 사단 <input type="checkbox"/> 법인 아닌 재단 <input type="checkbox"/> 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농어촌공동체회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단체 연혁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 5년 <input type="checkbox"/> 6년 ~ 10년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타인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공동 임대 <input type="checkbox"/> 단독 임대 <input type="checkbox"/> 자가 소유건물				
실무책임자 (대표가 실 무책임자인 경우도 포 합)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input type="checkbox"/> 유급 <input type="checkbox"/> 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속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 5년 <input type="checkbox"/> 6년 ~ 10년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상근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명 <input type="checkbox"/> 2명 ~ 3명 <input type="checkbox"/> 3명 ~ 5명 <input type="checkbox"/> 6명 ~ 10명 <input type="checkbox"/> 10명 이상				
자원활동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명 <input type="checkbox"/> 2명 ~ 3명 <input type="checkbox"/> 3명 ~ 5명 <input type="checkbox"/> 6명 ~ 10명 <input type="checkbox"/> 10명 이상				
회원수(구성 원)	<input type="checkbox"/> 2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20명 ~ 49명 <input type="checkbox"/> 50명 ~ 99명 <input type="checkbox"/> 100명 ~ 199명 <input type="checkbox"/> 200명 이상				
년간 예산	<input type="checkbox"/> 2천만 미만 <input type="checkbox"/> 2천만 ~ 5천만 <input type="checkbox"/> 5천만 ~ 1억 <input type="checkbox"/> 1억 ~ 2억 <input type="checkbox"/> 2억 이상				
주 수입원	<input type="checkbox"/> 회원 회비 <input type="checkbox"/> 기부금/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자체 사업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부금/후 원금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영수증 미발급				
시민 참여 형태 (중복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참여 <input type="checkbox"/> 후원참여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참여 <input type="checkbox"/> 참여 안함				
비영리민간 단체 미등 록 사유	<input type="checkbox"/> 제도를 모름 <input type="checkbox"/> 자격이 안됨 <input type="checkbox"/> 절차가 복잡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낌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간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기 간행물: <input type="checkbox"/> 발간 안함 <input type="checkbox"/> 1종 발간 <input type="checkbox"/> 2종 발간 <input type="checkbox"/> 3종 이상 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발간 안함 <input type="checkbox"/> 발간				

(3) 주력 활동분야

주력 활동분야 (가장 적 합한 1곳 만 체크)	1. 사회일반 <input type="checkbox"/> 사회혁신 <input type="checkbox"/> 권력감시 <input type="checkbox"/> 정치/행정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소비자권리 <input type="checkbox"/> 정책개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환경/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교통 <input type="checkbox"/> 도시일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여성/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복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일반 <input type="checkbox"/> 의료/보건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타복지() <input type="checkbox"/> 교육/문화/체육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예술 <input type="checkbox"/> 체육 <input type="checkbox"/> 레저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인권/노동/민권/사능 <input type="checkbox"/> 인권/평화 <input type="checkbox"/> 인권 <input type="checkbox"/> 평화 <input type="checkbox"/> 통일/민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노동/빈민 <input type="checkbox"/> 노동 <input type="checkbox"/> 농어민 <input type="checkbox"/> 빈민 <input type="checkbox"/> 노숙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이주민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이주노동자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봉사/구호/나눔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구호 <input type="checkbox"/> 기부/나눔 <input type="checkbox"/> 국제연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3. 풀뿌리운동 <input type="checkbox"/> 주민공동체 <input type="checkbox"/> 주민공동체/자치 <input type="checkbox"/> 마을만들기 <input type="checkbox"/> 문화나눔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안사회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지역화폐 <input type="checkbox"/> 생태공동체 <input type="checkbox"/> 마을경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도농순환 <input type="checkbox"/> 먹거리 <input type="checkbox"/> 로컬푸드 <input type="checkbox"/> 도시농업 <input type="checkbox"/> 도농교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교육 <input type="checkbox"/> 마을학교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학교 <input type="checkbox"/> 아동센터 <input type="checkbox"/> 대안학교 <input type="checkbox"/> 마을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공헌 <input type="checkbox"/> 산촌유학학교 <input type="checkbox"/> 시민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창출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 <input type="checkbox"/> 자활공동체 <input type="checkbox"/> 전문지식 지원 <input type="checkbox"/> 시민사회지원(재단/시민센터/중간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기타 ()

(4) 활성화 과제/정책지원 서비스

최대 애 로점	<input type="checkbox"/> 재정 위협 <input type="checkbox"/> 회원감소 <input type="checkbox"/> 시민 무관심 <input type="checkbox"/> 전문능력 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성화 방안	<input type="checkbox"/> 활동가 육성 지원 <input type="checkbox"/> 단체들 간 연대 강화 <input type="checkbox"/> 정보 공유 <input type="checkbox"/> 공공서비스의 협력/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장 바 람직한 정부지원 형태	<input type="checkbox"/> 재정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정부 사업참여 <input type="checkbox"/> 환경/인프라 구축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장 원 하는 정 부 지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농어촌공동체회사 <input type="checkbox"/> 정부용역 참여 <input type="checkbox"/> 정부사업 참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바람직한 공공 서 비스 지 원조직	<input type="checkbox"/> 중앙부처 조직을 통한 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를 통한 지원 <input type="checkbox"/> 중간지원 조직을 통한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외 제안내용	